

서민 채무조정 부터 탕감까지 ‘특단 대책’… 은행은 ‘긴장’

이재명 시대, 금융업계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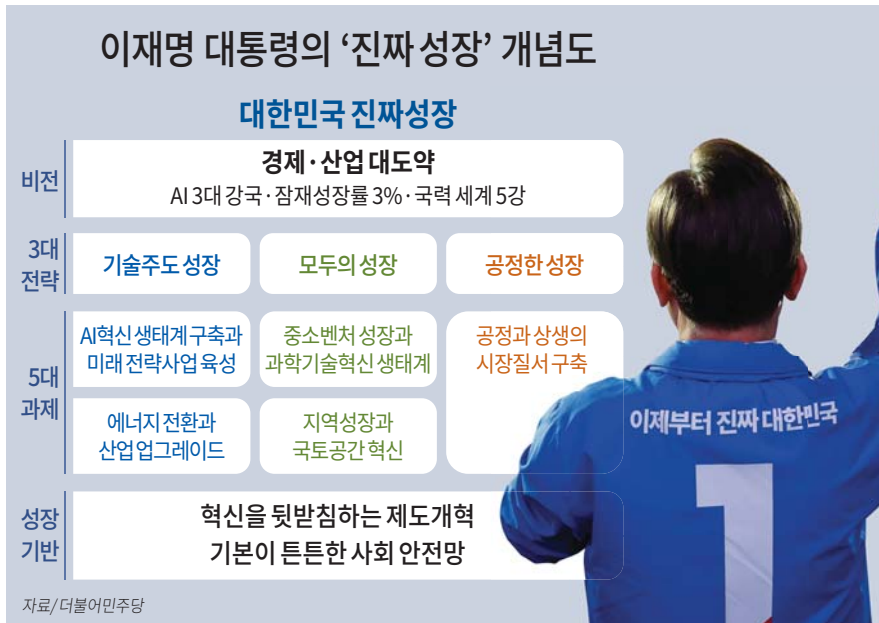
‘실용·공정·상생’ 3개 경제철학
소상공인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채무조정·폐업 등 지원 시스템 구축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금융지주 등 CEO 연임 깎아질 듯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철학에 따라 금융권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과 ‘공정’, ‘상생’ 세 가지로 귀결된다. 이(李)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금융으로 금융권을 움직일 전망이다.

◆ 더 빠른 ‘상생 금융’ 시즌3

현재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은행=공공재’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와 계엄 사태 이후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 만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한 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과 채무조정·폐업·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더 빠른 맛 ‘상생 금융 시즌3’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4

년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2조원가량을 상생 금융으로 지원한 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 총 2조 1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햇살론15의 공급 실적은 4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37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분기(15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 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만큼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더 깎아질 CEO 연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대되면서 금융지주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도 더 깎아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원칙을 제시한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내부 규범을 개정하지 않도록 독립 이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증을 쪼개 권한을 분산한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바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서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년 65세 연장…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공약으로 본 금융시장

국민연금 첫 가입 청년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장 기준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기준 완화
현물 ETF 등 가상자산 기반의
파생상품 발행·상장 허용 하기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 유튜브를 초청해 개최한 ‘경제 토크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견해를 냈다. /민주당 유튜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 정부의 금융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한 만큼 공약 실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금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정부의 공적연금 공약은 ‘노후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 공제 후)이 발생하면 일부를 차감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만 18~60세)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 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군 복무 기간 가

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직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제도(현행 중위소득 150% 이내, 20만원 내 지원)를 개선하고, 세액 공제 기준도 높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공약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했던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수수료를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치도 논의한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통화 주권을 공고히 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성장을 억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통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맞춤형 주택 등 중산층·저소득층 공급 정책에 집중

공약으로 본 부동산 시장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 주택용 전환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다. 당초 거론했던 4기 신도시는 막판에 철회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화와 함께 2기,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고, 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 초고가 아파트 누르기보다 공급에 집중

새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먼저 신축 수요를 막는 고분양가 문제부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공공성 강화 원칙이 지켜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도 주택용도로 전환을 추진한다.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방안에서는 4기 신도시 연금이 사라졌다. 3기 신도시 건설도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만큼 현

실적으로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함께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만들어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선자는 공약에서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은 극히 말을 아꼈다. 생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만 언급했다.

◆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맞춤형 정책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은 고려하겠지만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자녀수에 따라 분양권한급감면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며, 소득요건도 완화를 검토한다. 민영주택 공급시에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인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도 확대한다.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피+역세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과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셰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도 검토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